

제311회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3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12월6일(목)

장 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보고
가. 외교통상부
나. 통일부
2.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3.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긴급현안보고 1
가. 외교통상부
나. 통일부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5
2.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정문헌·길정우·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영우·김을동·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심윤조·안홍준·원유철·윤상현·이병석·이자스민·이장우·이철우·이현재·정병국·정의화·조명철·홍지만 의원 발의) 15
3.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심재권 의원 외 10인 발의) 15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안홍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발표와 관련한 사항,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 등을 포함한 정부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보고

가. 외교통상부

나. 통일부

○위원장 안홍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지난 4월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이어서 12월 1일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긴급현안보고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의 내용,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발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의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일 북한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오는 12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지난 4월 발사 당시와 유사하게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소위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관련 발표 직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북측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와 지난 4월 16일 의장성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관련 국들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긴급 협의를 가졌 으며, 모든 해외 주재 우리 공관에 주재국 정부 에 대해서 북한의 발사계획 철회를 위한 외교적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발표 직후부터 외교통상부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상시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 니다.

12월 2일 일요일에는 외교통상부 긴급대책회의 를 개최하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 하였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외교안보장관회 의에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발사계획 발표에 대해 차분하되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를 불러 북한의 발사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각국이 북한의 발사계획 철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하 여 중국 측과 협의를 가졌으며, 현재는 미국을 방문하여 미측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 중 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 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발표에 대 해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많은 다른 국가들과 유엔·EU 등도 성명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 다.

주요국 반응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이를 중대한 안보리 결 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 지 말 것을 경고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북한 이 이를 무시하고 재차 발사를 시도하려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자 정면 도 전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차분하 되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미·중·일·러 등 관련 국들과 함께 북한의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 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 응조치가 있도록 외교적 교섭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발표 와 관련한 외교통상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익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과 정부의 대응방향 그리고 최근 북한 동향 에 대해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발표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북한은 소위 실용위성을 12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발표 당일 통일부는 주요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개성공단 현지 24시간 비상연락 및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교류협력 현황과 개성공단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 민들의 신변안전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12월 3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을 평가하고 대처방향을 논의하였으며, 12월 5일 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제2하나원 개원식 기념사 를 통해 미사일 발사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제사회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 발표에 대해 비난하면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거둬들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사를 시도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민생 개선에 진력하기를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및 관련국들과 협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발사계획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에게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안보 위협이므로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남북관계 조치는 대북정책의 기초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논의, 국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교류 등은 신중하게 조정하면서 개성공단엔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 부처 간 협조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북한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내 동향입니다.

9월 이후 김정은은 평양 시내 스포츠시설 유흥장 등 위락시설과 공안기관 위주로 공개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 방문, 인민보안부 소속 전국 분주소장 회의 등 주요 공안기관의 공개행사를 이례적으로 개최하여 공안통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절, 전국 노병 초청행사, 전국 어머니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여 김정은 우상화 및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각과 군부 등에 대한 주요 인적개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성택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고, 지난 4월 이후부터는 당·정·군에 대한 인적개편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주요 인물들이 대폭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난 해결을 위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개혁·개방으로 해석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대남 동향입니다.

북한은 대통령 및 정부 정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서는 극단적 위협을 하는 등 대결·긴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비난 등 대선 개입 시도가 17대 대통령선거 대비 3배 수준으로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정책 선철취 및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핵억제력 강화 등의 위협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경제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과는 지난 11월 유골 문제 등을 의제로 국장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고 2차 회담을 12월에 갖기로 하였으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발표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원유철 위원입니다.

먼저 외통부장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17일 날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뭐 이것은 북한의 정치적인 판단과 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날짜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유철 위원 아무튼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이 10일서부터 발사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발사에 필요한 날짜를 역산해 보면 10일 이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미 지난 4월에 의장 성명이 나올 때 북한이 그것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결의를 한 바가 있고, 그러한 발사가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논의하게 이렇게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회원국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원유철 위원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안보리 이사국들과는 제재 방향에 대해…… 현재까지는 저희가 북한이 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실제적으로 북한이 어떤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재에 관해서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중국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유엔의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중국의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실제 제재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까지는 중국도 공식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

명하고 발사 자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임성남 본부장께서 중국 방문 마치고 지금 미국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가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중국 방문 결과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원유철 위원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과도 최종 순간까지 북한이 발사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 하는 쪽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북한 측에 대해서 발사 자체를 촉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아니, 중국이 북한에 촉구를 하는데 북한의 반응은 어떻다고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 현재까지는 북한이 중국의…… 또 중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그런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쏘는 것을 자기들로서는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서 새모어 (Samore) 조정관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동맹국과 상의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정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번에 임성남 본부장이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는 하였습니다.

○원유철 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적절한 대응조치가, 미국과 우리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지금 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외교적인 노력을, 쏘지 말라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북한이 분명히 자기들이 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경고나 또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조치를 지금 계속해서 분야를 발굴하고 또 관계국들과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어떠세요, 장관님? 실제로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까, 못 거둘 것 같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외교부장관으로서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최후 순간까지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미국 일본, 한반도 주변 국가와 또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의 변화 또는 여러 최근의, 오늘도 일부 조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정은의 군부 장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력 내부 구조의 불안정성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그 시도는 지난 20년간 핵무기 개발과 함께 집요하게 그리고 꾸준히 해 온 것입니다.

다만 왜 이 시점을 택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원유철 위원** 혹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점을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이 이제 1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도 고려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발사 실험은 그동안 계속되어 온 노력의 선상에 있고, 이 시점을 택하는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홍준**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입니다.

○**정청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그러면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먼저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일본·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견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아직까지는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고, 끝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북한이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외교적인 노력을 하자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발사 시점까지는 어쨌든 외교적으로 막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은 이지스함 또 MD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고 있지요,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원혜영 위원** 또 일본은 이번 기회에 자위대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국의 군사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의 극우세력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국제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일본만은 신바람난 모습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에서 그렇게 레이더를 배치하고 하는 것은 아마 실제로 위성이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에 그 궤적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발표한 궤적은 일본을 통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혹시 그것이 만일의 경우 궤적을 이탈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원혜영 위원** 일부지만 지금 일본의 큰 흐름이, 헌법까지 개정해 가지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들겠다 이런 흐름이 있고 또 국민의 지지도 상당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로켓을 계속 발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일본 같은 데서 이런 극우세력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의 군사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은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평화적 실용위성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에 대한 모색이 다시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2000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정일 위원장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합의사항이 있지요. 그게 타결은 안 됐지만 알려지기는 타결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 건데 북한은 노동미사일 등 사정거리 500km 이상 미사일의 추가 개발과 생산을 하지 않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은 폐기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매년 3개의 인공위성 발사를 지원한다—물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지원한다는 것이겠지요—이런 식으로, 물론 타결은 되지 않았습시다만 이렇게 상당히 근접된 주요 합의 내용이 있었는데, 북한의 위성 보유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로켓 발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매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다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건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2000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사일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습시다마는, 그 당시와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른 것이, 그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이미 두 차례나 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이 장거리 미사일이 결국은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시절의 협의와 지금과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혜영 위원 어떻든 이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뭔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이런 게 또 새 정부가 곧 구성되는 시점에서, 또 미국도 오바마 정부 2기가 시작됐고 중국도 또 새로운 시진핑 체제가 발족했고 일본도 또 정권교체기고 그런 시점에서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아주 친절한 고발대리인을 이번에 구하셨어요. 서상기 의원이 통일부장관을 대신해서 문재인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

상회담을 통해서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발언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 그리고 통일부장관에 의해서 확인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의 공식 확인에 따르면 문 후보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 밝혀졌다, 이는 허위사실로 통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훌륭한 친절한 고발대리인을 둔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습니까, 서상기 의원이?

○통일부장관 류우익 서상기 의원님과 의논은 물론 없었고요.

○원혜영 위원 그러면 통일부에 사전 동의를 구한 적도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서상기 의원께서 제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서면질의가 있는 것을 실무 차원에서 답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답변 자료에 ‘남북정상회담의 기록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소위 녹취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또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우리 정부가 지켜 왔으며 앞으로도 확고하게 지켜 나갈 입장을 밝혔다’ 전혀 문재인 후보가 한 얘기하고 다른 게 없는데 서상기 의원은 ‘통일부에 공식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 차이를 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통일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통일부가 그런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보관한 적이 없고 통일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말씀드렸고……

○원혜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하고 문재인 후보의 발언하고 상치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러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서상기 의원은 통일부가 마치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해 준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하는 서상기 의원의 행태가 통일부의, 또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저는 그 문서를, 서상기 의원께서 고발하였다고 하는 문서를 아직 보지

못했구요.

○원혜영 위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언론 보도를 보기는 봤는데……

○원혜영 위원 아니, 그것 진짜로 못 보셨어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못 보았습니다. 그 문서는 저한테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원혜영 위원 아니, 신문에도 다 났고……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를 한 것은 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혜영 위원 그런데 이 친절한 서상기 의원이 통일부와 통일부장관의 명예를 지켜 주겠다고 장관께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한번 ‘어떤 내용이나?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러느냐?’ 한번 보시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상식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가 너무 없어져서 문제입니다마는.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제가 그 문서가 고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언론 보도로 보고, 또 우리 실무진이 뭐라고 답했는가를 봤는데 제 의견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대화록이라는 것을 통일부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고,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므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았으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법 당국에서 저한테 전달이 되어 온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실제로 그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

○원혜영 위원 사족입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호기심이, 관심이 없으신 것도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임위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통일부의 직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때는, 제가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일이 정치적인 논의를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고 다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혜영 위원 지금 보도 보면 이렇게 친절하고 발 대리인은 처음 두신 것 같은데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

○원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홍준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는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차례 핵실험이 모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불과 몇 달 안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대포동 2호 발사 후 3개월, 은하 2호 발사 후 1개월 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랬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김정일 최대의 공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김정은은 김정일 업적에 대한 계승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예고한 대로 이달 중순경에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이후에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미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 하는 것을,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현재 외교 사정으로는 예를 들어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의도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내부 결속으로 보는 게 중론인데요.

그런데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는

그런 실패를 만회할 목적으로 핵실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외교장관님도 인정을 하시는데요 핵실험으로 이어질 경우까지 대비한 정부의 대처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리고 현재는 일단은 외교적인 그런 부분 이런 얘기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현재는 외교적인 노력에 집중을 해서 하여튼 북한이 발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외교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러면 발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그런 대책은, 혹시라도……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런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발사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재 미국이……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님께서 4일부터 오늘까지 워싱턴에서 혹시 그 사이에 그쪽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뭐 나온 것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그대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쏘지 않도록 하되 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하는, 아직 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가정적인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것 보면 4월 달부터 4월 달 발사 그 이후에,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 마지막으로 9월 말에 계속 보면 엔진성능 실험을 계속 해 왔는데요, 지속적으로 재발사를 준비를 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번에는 국제사회에 대한 통보가 좀 늦어진 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북한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 전에 미리 미국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면 정부 측에서는 북한이 미사

일을 재발사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을 저희가 포착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미리 파악을 하신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러면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이미 그전에도 미국이랑 다른 국가들이랑 혹시 논의한 그런 내용이 있고, 현재 4일 날부터 가계신 그 본부장님께서서는 이미 논의된 내용에 대한 조율 정도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미 저희가 정황을 파악한 이후부터 주변국들과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런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이번에 미국에 현재 본부장이 가서는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이미 3단 추진체 조립까지 마친 상황에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미사일 발사 이후가 문제인데요, 미국에서는 BDA식, 방코델타아시아 식 제재를 넘어서 이란 제재 수준의 금융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정부에서도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된 것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 측과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꼭 이렇다 이렇게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 하는데도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자스민 위원 미국은 그렇고요, 지금까지 북한에 많은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더욱 중국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과 별도로 논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중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중국이랑 현재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합의된 내용들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중국과 발사를 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협의는 했지만 합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이자스민 위원** 일단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미국은 이란 제재 수준의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중국의 경우는 이제 막 꾸려진 새 지도부가 긴장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일본도 요격미사일 배치하고 요격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이고요.

오히려 고립과 긴장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 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내각·군부 등 주요 인적 개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고, 또 국제사회에서 차후의 협상 지위 등을 고려한 외부적인 의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금년에 4월에 했는데 12월에 또 하는 것은 시점을 상당히 앞당긴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점을 이렇게 앞당겨서 1년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고려를 또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렇지요,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것이 2009년하고 4월 달에 전문가 파악했던 그 내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래도 좀 자기 시간대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4월 달에 발사하는 것 보니까 오히려 12월 중순에 가능하다고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는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다 철저하게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홍준**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길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우 위원** 외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용어, 주요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습니까? 위성, 로켓, 미사일, 어떻게…… 우리 정부는 지금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우리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같은 발사체라도 위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로켓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탄두를 운반하기 위해서 개발하면 미사일로 호칭을 하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이것이 핵무기 운반을 목적으로 해서 위성 발사로 가장을 해서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길정우 위원** 국무부 12월 1일 날 대변인 성명에서는 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이 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정우 위원** 중국도 위성이라고 쓰고 있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길정우 위원** 일본도 위성이라고 쓰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길정우 위원** 저희만 지금 미사일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사일이라고 쓰는 배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 때문입니다.

○**길정우 위원** 저희 정부는 계속 이게 위성을 탑재를 하든 핵탄두를 탑재하든 계속 미사일로 쓰겠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것은 북한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정우 위원** 다음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용위성 발사 예고한 다음 날 조평통 서기국이 7개 항, 박근혜 후보에 대한 7개 항 질문을 발표를 했어요. 북한 체제의 성격상 이런 문제들이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협의는 되었다고 보는 게 맞지요?

○**길정우 위원** 위성 발사에 대한 예고하고 조평통 서기국이 우리 국내 대선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것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한 군데에서 조율이 되어서 나왔다고 보는 게 합당하겠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조율이 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길정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언론의 해석입니다마는 오늘 장관님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위성이고 이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한 의미 분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언론의 분석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장관께 여쭙는데, 이게 우리 한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의도라면 그게 북측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화 분위기를 저해할 게 분명한데 그게 북측에 도움이 될까?

하여튼 제 판단으로 보면 이게 우리 한국 대선의 타이밍과 위성의 발사 타이밍이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장관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류우익** 대선 개입을 주목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단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우리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선의 어떤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입을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부로서 염려하는 것은 평화롭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개입이라고 보고 그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선거에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정우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다만 분위기를 망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가

될 수 있다? 그래도 뭔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텐데 분위기를 흐뜨려 놓는 것이 도움이 될까, 그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목이라서……

물론 일리가 있는 부분적인 해석입니다마는 대선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는 것, 위성이든 미사일 발사든 그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길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입니다.

외통부장관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복되는데요. 왜 로켓을 발사하는지,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발사하는지, 발사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2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주최로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일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장관님, 그 실무회의의 주요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장관님, 미국의 임성남 본부장에게 그 회의결과를 언제 보고받으셨는지 연달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의 실무협의에서도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일 3국이 외교적인 힘을 모아서 북한이 발사를 중지하도록 하는데 끝까지 노력을 하자 하는데 합의를 했고요. 다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경우에도 대비해서 그 이후의 상황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인재근 위원** 곧바로 보고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연합뉴스에서 12월 5일 새벽에 임성남 본부장의 말을 인용해서 한미일 실무회의의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외통부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 아직 미국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제가 한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본부장이 저한테는 또

바로 전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합시다만 아마 실무과에서는 조금 문서 정리가 늦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재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통일부장관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지금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도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5·24 조치를 완화하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이때 또 장거리 로켓 사건이 터졌는데요. 지금보다 더 제재를 강화한다면 남북교류협력이 모두 정지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와 함께 협조를 해서 이러한 도전적인 행위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남북관계가 이미 상당히 경색돼 있고 또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제재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되 가급적이면 남북관계 향후의 발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해 가면서 원칙을 지켜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홍준 인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북한이 ‘실용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국제사회나 우리나라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실용용이 아니라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의도가 뭐냐, 특히 시점상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이게 우선은 핵무기 개발의 일환이다 하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다음에 전문가들 평가는 내부적 결속용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대외적 존재감의 표시이다, 이게 오바마 정부 2기를 맞이해서 대미 협상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 우리 대한민국의 12월 19일 날 대선 국면을 맞이해서 남남갈등을 심화하게 해서 분열을 유도하려고 한다 하는 시각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그러니까 북한이 이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정부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첫 번째 대내적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대외적 존재감 표시, 또는 대미 협상용으로 한다면 했을 때에는 특히 미국과 또는 우리하고 인접한 국가들과 공조를 하는 데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남남갈등,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의도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을 유불리,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대선 선거용으로 접근을 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자체가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에도 이것을 전제로 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한 가지는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야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가졌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저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결국은 핵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속

하겠지만 시점을 선택하는 게 이제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하고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탄두 자체만도 한 3000만 불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 한화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 한화로 하면 아마 한 30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지금 북한의 현실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 가면서 이러한 무모한 행위를 하면서 국제적 사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재 수단도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발사 전까지는 최대한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발사를 저지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만의 하나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응분의 국제적 사회로부터 북한이 제재를 받을 것이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정부의 입장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국, 북한하고 가장 우방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 그렇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제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공표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만큼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대내외적으로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인민들이 알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에 가고요. 다만 저희가 제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표하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지금 현재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러한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 간에 정도에 대해서, 경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일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경고를 하고 제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일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분명히 외교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만 가지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거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거나 했을 때마다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시도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제재가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국제적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발사하는 게 자기들에게 뭔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 국가가 우리 외교력이 해내야 될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주안점을 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북한이 만약에 핵을 발사를 했을 때, 서울에 쏘았을 때 이렇게 해서 핵방사능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가정을 해 가지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조사한 바가 있지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 17 t 핵탄두가 우리 서울에 떨어졌을 때 무려 26만 명이나 사망을 하게 되고 돈으로 따지면 약 1200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게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외교적 접근방법 이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남갈등이라든가 대선에 이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야 공히 이것을 절대적으로 대선에 이용하거나 또 대선 국면으로 끌어들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장관께서 답변에 3000억 원이 맞습니까, 3000만 불이 맞습니까? 3000억 원이라면 3억불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기존에 투자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 토털을 합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추산하기에 지금 현재 동창리에 발사하게 돼 있는 시설비에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우리 개념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4억 불 정도가 투자가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투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드는 제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 근처 산음동이라는 곳에서 제조를 하는데 거기에도 한 1억 5000만 불 정도의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인공위성 자체를 만드는 데도 한 1억 5000만 불 정도의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대포동을 개발할 때는 한 2억 불 정도가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기투자분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성체 자체만의 가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투자된 그런 부분을 같이 합산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그러면 위성 자체는 3000만 불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위성 자체는 아마 한 3000만 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시청자가 오해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남남갈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심재권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있고요, 또 지난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표현은 로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다 결의안이. 그런 점은 여건 야건 간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장관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이달 10~22일 사이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10~22일 사이……

○박병석 위원 김정일 위원장이 죽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17일입니다.

○박병석 위원 17일이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박병석 위원 10일과 22일의 딱 중간은 16일이 되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왜 남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자꾸 대선과 연결되어서 보도가 나오고 그렇게 논의가 되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정부에서 대선과 연결시킨 적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또는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동안에 이 미사일 발사와 관계없이 북한이 대선 개입을 위한 여러 가지 매체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배경이 된 것 같고, 과거 대선 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이 대선 개입을 위한 액션이라고 정확히 확정지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죽은 것이 12월 17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즉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등장이 1주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미사일 발사가 10~22일, 딱 중간이 16일이라면 그것과 상당한 연계가,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당연히 그 시점을 선택하는 데 고려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외무장관께 물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현재의 목적은, 외교적 노력은 하여튼 로켓이든 미사일이든 발사를 안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외교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다 일치를 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동시에 미국에 가서는 발사를 중지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만약 발사했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는 제재방안까지 논의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중국에 가서도 함께 제재방안을 논의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구체적으로는 제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발사를 하지 않았는데 발사를 전제로 한 구체적 제재방안을 밝히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와 미국 간에 합의한 제재의 내용과 우리와 중국 간에 논의한 제재의 내용이 일치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은 현재까지 서로 양측 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서로 협의만 되었기 때문에 합의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엄중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1의 목표는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발사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발사를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밝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왜 하필이면 10~22일 사이에 발사를 하게 되느냐 하는 논의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김정일의 사망 시기, 김정일의 등장 시기가 각각 1주년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 시기다 하는 것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가령 미·

중·일 새로운 체제에 대한 대외협상력 우위의 확보라든가 또는 북한 대내 체제의 안정이라든가 또는 소위 대선을 앞둔 남남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겠지만 그러한 요소 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사망 1주기, 그다음에 김정일 등장의 1주기다, 한 돌이다 하는 것에 또 관점을 뒤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점도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께서도 그 점에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사실 중단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상정해서 채택하는 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중요한 일인데 지금 또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정해진 일정이 많아서 밖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또 들어오시기도 해서 의사정족수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의사정족수가 가능할 때 저희가 결의안을 먼저 상정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야당에서도 만들어 온 것이 있고, 저희 쪽에서도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시더라도 결의안 자체를 상정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홍준** 김영우 위원님 말씀은 결의안이 발의된 지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려면 상임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될 때 상정부터 해 놓고 다음 논의, 내용 문제는 충분히 토론하고 소위에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뜻이지요?

○**김영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1시23분)

○**위원장 안홍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두 건 회부되어 있습니다만 국회법이 정하는 숙려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결의안의 상정에 대해서 간사 위원님들 간에는 합의가 있었습니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정문헌·길정우·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영우·김을동·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심윤조·안홍준·원유철·윤상현·이병석·이자스민·이장우·이철우·이현재·정병국·정의화·조명철·홍지만 의원 발의)

3.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심재권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안홍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문헌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심재권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이상 2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문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의원** 정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10~22일 사이의 실용위성 발사 계획은 실용위성을 빙자한 명백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종류의 로켓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대한민국이 오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켜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임에 틀림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에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이 예고한 실용위성 발사가 실용위성을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하여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인 만큼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에 대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명한 위협이니 만큼 이를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셋째, 북한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긴장국면으로 몰아가는 한편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해소 노력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넷째, 정부는 북한의 금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매우 강력한 대북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안전대책을 포함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

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2월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12월 10~22일 사이에 자신들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718호 및 1874호의 위반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북핵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막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함과 함께 우리 정부가 즉각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동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도발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 및 제1874호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현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지도 적절히 대응하지도 못하였고, 그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노크 귀순 등 북한의 안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정부의 총체적 안보 무능과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이 주변국 등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실행에 옮겨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단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여 장거

리 로켓 문제를 비롯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결의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경륜을 바탕으로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홍준** 심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건의 결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 문제입니다.

금번 발사예정인 발사체의 용어와 관련하여 정문헌 의원안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서술하고 있고, 심재권 의원안은 “장거리 로켓”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북한은 금번 발사예정인 발사체가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발사하고자 하는 것이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인공위성 발사체는 형상, 구성요소, 적용기술 등에서 미사일과 동일하며, 그 위험성은 양자간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로 18대 국회에서 각각 의결된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 그리고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에서는 “로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위반 문제입니다.

동 2건의 결의안은 주문에서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및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 안보 결의는 북한에 대하여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하여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비록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위성발사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제1718호 및 제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가 안보리에 위배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및 제1874호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까지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안홍준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보고 질의하고는 또 다른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만 일단……

○정청래 위원 그냥 하시지요, 아까 순서대로.

○위원장 안홍준 이대로하시고, 시간 후에 또, 현안보고에 대해서 하실 분은 또 추가로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추가가 아니라 이 현안보고……

○위원장 안홍준 그러니까 대체토론을 마치고 현안보고를 추가로 할 것이면……

○정청래 위원 형식은 그런데요,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냥 아까 순서대로 하시지요.

○위원장 안홍준 대체토론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윤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조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에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그것을 보면 ‘북한이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안보리에서 협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동상정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자동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만약 발사를 하면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소집이 되는 것이구먼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소집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1월 달에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은 아직, 안보리 자체에서 날짜는 소집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가급적 신속히 소집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저희는 1월 달부터 안보리에 멤버가 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는 1월 달부터입니다.

○심윤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사일발사하면 저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 협의에 직접 참여를 못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12월 달에는 참여가 아니고……

○심윤조 위원 12월 달은 아니고 1월부터는 참여를 하게 되겠구먼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직접 참가는 안 하지만 새로 이사국이 되면 대개 그 전 달 정도에는 안보리에 와서 참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심윤조 위원 그러면 12월부터 참관도 가능하구먼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회의장에는 저희들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가 있을 수 있고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 간에 결의안이 있는데 명칭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까 길정우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대답드렸습시다라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발사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장해서 기본적으로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리고 안보리에서 토의가 되면 정부가 들어가서 협의를 하는데, 야당의 성명내용을 보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너무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강조를 해서 안보리에서 협의하는 우리 정부 측 대표 입장이 좀 머쓱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전분열과도 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보면 남북대화 재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미사일발사하고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제재까지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대화가 들어가는 것은 좀 앞뒤

가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이야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2006년에도 이미 대포동 2호가 발사가 됐고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북한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북한의 행위는 북한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우리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윤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자스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미사일발사 실험 이후 몇 개월 뒤에 핵실험이 이어져 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심윤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사일발사 실험에 이렇게 유엔까지 가서 제재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핵탄두 소형화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 이러한 장거리, 자기들이 주장하는 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미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형화됐을 경우에 운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심윤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결의안 대체토론 겸 현안도 함께, 이 결의안에 묻어 있는 만큼 함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010년 2월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놓고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실무회담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때 남북 간에 합의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합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합의서는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여기에 김남식 실장 계신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심재권 위원** 나와 주십시오.

2010년 2월 8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지구 관광 재개를 위한 그런 실무접촉이 있었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있었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때 북측과 합의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북측이 합의를 제시를 했고요, 그때 합의는 안 됐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러면 북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했을 뿐이지 우리 남측에서는 이 합의서에 함께 동의한 적이 없습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남측대표단 단장 김남식” 이렇게 나오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 합의를 제출할 때는요, 통상 폴텍스트를 해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할 수 있게끔 칸을 만들어 놓았다는 의미이지요.

○**심재권 위원** 우리 남측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시한 그런 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저희는 그때 해당 당일 날은 합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리러한 식으로 신변 안전이 되어야 되고 이리러한 식으로 진상 규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즉 설명을 했고요, 합의서 안은 별도로 제시를 안 했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러면 이때 나온 소위 실무접촉 합의서라 함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일 뿐이지, 우리 측에서 여기에 합의하거나 또는 우

리 측의 독자적인 안을 준비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심재권 위원** 잠깐 들어가십시오. 다시 필요하면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계속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그동안에 ‘북측이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해서 당국의 이름으로 신변 보장을 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북측 당국이 우리 당국에게 신변 안전 보장을 하면 실무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심재권 위원** 자, 그러면 바로 지금, 2010년 2월 8일 날 실무접촉이 있었을 때 이때 북측에서 제시한 안은 그것은 북측 당국이 제시한 안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당시에 합의문 초안이, 제가 초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태와 우리 현대아산이 합의한 공동발표문에 입각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근거를 민간에 두고 있습니다. 민간에 두고 있는 그것을 당국의 신변 안전 보장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심재권 위원** 장관, 저는요, 오늘의 이 로켓발사 문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의 결과가 빚어 낸 이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이 정부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이 좋아 ‘비핵 개방 3000이다’ ‘그랜드 바젠이다’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북측이 굴복해 들어오기만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2월 8일 이 실무접촉도, 제가 지금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명백히 북측 당국의 이름으로……

대체토론이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홍준** 일단 5분을 하고, 1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북측 당국이 명백히 신변 보장을 당국의 이름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북측 당국이 실무팀에서 제시하면서 다만 그

근거를 이미 자기들이 이러 이렇게 해 왔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것이 지금 실무 대표자의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이 이상 뭘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켜 온 것이 오늘의 미사일 사태, 로켓 발사 사태도 불러오고 있지요. 지난 4월에 북한이 실패했지만 로켓 발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일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위원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원인은 북측이 제공했고 그것도 민간이 아닌 군이 우리 민간인을 조준 사격함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책임 있게 해명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 조사와 책임 소재를 밝힐 것과 사과와 모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원인을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마치 우리 정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심재권 위원** 장관 그렇게 잘못된 답변 하지 말아요. 내가 그렇게 지적한 적 없어요. 원인이 지금 박왕자 씨 피살로 빚어졌다는 것 천하가 다 아는 이야기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권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이명박 정권이 해 온 태도가 이렇게 악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있다고 하는 데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 프로그램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심재권 위원** 내가 지금 장관께 책임을 묻는 것은, 이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렇게 사태가 악화돼 오도록 지난 5년간 뭘 했는지, 금년 4월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로켓을 발사

하는 것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야 당연히 북측의 책임이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재권 위원**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도록 이렇게 방치해 온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금강산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 실무 합의에 나선 북측의 대표단은 명백히 북측 당국자지요? 당국자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당국의 실무자입니다.

○**심재권 위원** 실무자도 당국자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실무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 민간의, 민간기구의 합의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심재권 위원** 보십시오, 장관. 그렇게 호도하지 맙시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군이 저지른 도발을 당국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간의 얘기에 근거를 두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협상……

○**심재권 위원** 명백히 지금 북측이 제시한 이 합의서에서 북측이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 회장과 그의 그 대화를 빌려서 그러나 북측 당국자의 이름으로 신변보장을 하기로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신변 안전보장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지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합의문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안 나와 있고요 아태가 나와 있습니다. 아태도 민간단체고 우리 현대도 사기업입니다. 이 사이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측이 이러한 민간인을 사살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의 우리 회담 대표들이 그러면 이 문제를 당국 간의 그것으로 해서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라고 했는데 북측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그 뒤에도 우리 정부는 그런저런 것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심재권 위원** 바로 이 자리에서도, 국회 논의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류 장관의 그 답변 내용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온 그것에 불과하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권 위원** 바로 지금 이 정부의 그런 태도가 오늘의 이런 악화된 상황을 가져왔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지금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북측이지 남측이 그것을 악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심재권 위원** 보십시오. 북측의 지금 책임 자체는 원천적인 것입니다. 북측이 지금 미사일,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할 때 그 책임이 북측에게 원천적으로 있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당연합니다.

○**심재권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켜 온, 거기에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무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러니까 상황은……

○**위원장 안홍준** 심재권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어쨌든 대체토론이니까 다시 현안질의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난 4월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이런 정부의 무능한 태도가 오늘의 이런 악화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심재권 위원** 대체토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 안홍준** 아니, 나중에……

○**심재권 위원** 그럼 보충질의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안홍준** 예, 심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 대체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하 위원** 저는 대체토론이 아니라……

○**정청래 위원** 대체토론 할게요.

○**홍익표 위원** 현안질의를 하시지요. 계속 대체토론 하면 끝없이 갈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 아니, 대체토론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안홍준** 아니, 대체토론을 하고 이것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고, 현안질의를 하실분은 더 하시게 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마무리하시고 그냥……

○**정청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현안질의 하자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대체토론 하자고 그러니까 저도 대체토론 할게요.

○**위원장 안홍준** 그러니까요. 대체토론 하십시오.

○**홍익표 위원** 이렇게 하면 대체토론 끝없이 갑니다.

○**황진하 위원** 제가 대체토론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대체토론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것으로 할 테니까 여기서 마감을 해 주시면……

○**위원장 안홍준** 알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소위로 넘겨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로 넘어갈 문제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오늘 현안이 저희 결의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현안질의와 대체토론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대체토론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안홍준** 정청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저는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묶어서 하자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자니까 저는 위원장님에 따르겠습니다.

외교통상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올 1년을 제가 살펴보니깐요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2년 4월 16일 유엔 안보리 북한 로켓 발사 관련 의장성명이 채택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백악관 관련 인사 8월 극비 방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점은 미국의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갔는지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고, 장관도 모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는 바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 백악관 관리들이 극비리에 방북했다는 사실을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아셨습니까, 장관도?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아니면 그 이전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동아일보 보도를 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도 그러면 동아일보 보도 이후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언론, 보도에 대해서 확인……

○**정청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몰랐고 보도가 나왔고 그러면 외교부장관으로서 누가 갔는지 왜 갔는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알아보셨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문의는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문의는 했는데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알려주지 않는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썽요, 저희가 상대하는 부서는 국무부인데 국무부도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런 것이 문제지요. 지금 계속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북한 책임이나 우리 정부 책임이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북한 책임이지요. 북한이 잘못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핵실험을 하는 것 북한이 잘못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그리고 만약에 북한도 대한민국 정부 책임이다 그러면 본인들도 자존심 상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을 왜 남쪽 정부 책임이라고 하느냐’ 본인들도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북한이 잘못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문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통일부 외교통상부에 대한 비판의 관점이지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백악관 관리들이 8월 17일 날 극비리에 4일간 평양을 방문했는데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안 가르쳐 주면. 그런데 관제·통제는 중국한테 요구를 했어요, 미국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갔던 루트를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제를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못 해 주겠다, 왜 가냐, 뭐 하러 가나라는 것으로 달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길은 다 닦아 주고,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고 바로 이런 점이 무능이라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말씀은 동아일보 보도를 완전히 기정사실화를 해서……

○정청래 위원 아니, 제가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외교통상부에서 정정보도 신청을 해야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정정보도 신청할 사안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국민들이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정청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론입니다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관리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랬고, 미

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 12월 달 들어서자마자 로켓 발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갔다면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타임 스케줄을.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하고 직거래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고 이것이 바로 안보 외교 능력 이런 부분을 테스트 당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로켓 발사 하겠다 그러는데 미국이 전례와 다르게 그다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의례적 수준의 논평만 내고 있는 이런 상황, 다시 말해서 외교부에서 좀 외교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인데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했으면 국회에서 할 일도 없어요. 잘 못하시고 계시니까 국회에서 따질 일도 있고 그런데 주요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더라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은 제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논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위원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로켓을 발사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북한 마음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리고 아까 박병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꼭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 것이냐, 아니면 김정일 서거 1주년 내지는 김정은 체제 출범을 알리는 자신들의 어떤 축제, 과시 이런 용인가는 차후로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복합적으로……

○정청래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위로할 수 있는 외교적인 이런 활동을 좀 저는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 점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당 안과 저희 결의안이 대동소이한데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지금 장관님들께서도 동의하지 못하셨고 저도 좀 이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우리 쪽 결의안의 이름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민주당 쪽 결의안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윤조 위원님이나 길정우 위원님 질의에 장관들께서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사체가 위성을 탑재하면 로켓이라고 표현을 하고 미사일 경우에는 미사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현재 인공위성이라고 실용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로……

○정문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사체가 쏘질 때 80도 90도 각도로 쏘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문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발사체 같으면 끝까지 한 80~90도 그 직각 상태를 유지해서 올라가는데 이 대륙간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50도 60도 각도로 비행을 한다고 알고 있고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위성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쏜 탄두가 50도 60도 안에 들어왔던 것으로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정보당국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러나……

○정문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도미사

일인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것이 탄두를 운반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정문헌 위원 장거리 미사일용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지요? 그 위성의 무게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얘기하는 위성에 이번에 탑재한다는 것이 한 100kg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통상 위성은 100kg 정도……

○정문헌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성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500kg은 돼야 이것이 위성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500kg에서 1000kg까지인데 아무리 성능이 떨어지는 작은 위성도 500kg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kg은 돼야지 위성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위성으로서의 통상적인 기능을 한다면……

○정문헌 위원 그러면 이 100kg짜리 위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명백하고 그런 입장에서 정부는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로켓 대신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러면 이 결의안의 제목도 지금까지 국회가 로켓 발사라고는 해 왔지만 횡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정확하게 좀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부터라도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으로 이름을 명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러니까 미사일이 맞는 것이지요. 군사적 의미가 담긴 것이니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홍준 정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대체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황진하 위원** 대체토론 계속할 것 같으면 대체 토론을 하고요.

○**위원장 안홍준** 아니 대체토론 하고 나중에 또……

○**황진하 위원** 그러면 제가 대체토론 할게요.

○**홍익표 위원** 저도 대체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 미사일, 로켓, 위성 이 이름 갖고 지금 논쟁이 많은데요. 외교는요 말로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조치로서 단호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이나 로켓이라고 하면 우리의 분노가 덜 포함되고 미사일이라고 하면 강력하게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은 아니고요……

○**홍익표 위원**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자동차가 소위 얘기해서 불법으로 영업으로 삼으면 그것이 영업용 택시 됩니까? 로켓에 미사일을 올리면 미사일이 되는 것이고요 로켓에 위성을 올리면 인공위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나로호 그러면 미사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나로호하고는 다릅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장관께서는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한다고 그러지 미사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장거리 미사일,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마는 탄두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홍익표 위원** 지금 탄두 실렸습니까 위성 실렸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나 이것이 탄두를 운반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실린 것이 탄두입니까 위성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현재 탄두가 실린 것은 아닙니다.

○**홍익표 위원** 위성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위성을 실었다고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홍익표 위원** 미국도 그렇게 지금 일단 인공위성이라고 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미국은 그렇게……

○**홍익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는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 국익을 해칠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남북이 동시에 다 인공위성 발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북이 우리 인공위성, 우리도 인공위성을 미사일이라고 하니깐 그러면 남쪽도 제한하자 이런 역제안을 해 오면 어떻겠습니까, 국제 사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북한의 이런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핵개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북한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익표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90년대 초반에 우리 비핵화선언 할 때도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북쪽이 비핵화 해서 우리가 재처리능력 이런 것 다 포기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괜히 입으로 말로만, 제가 현 정부에서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야당에서 보는 것이 무능하다는 것이, 이런 현상 예상 못 했습니까? 북이 미사일, 인공위성 그 장거리 로켓 포 쏠 것 예상 못 했습니까, 정부는? 정부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재하고 응징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효율적인 능력이지요. 외교부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국방부만 있으면 되지요. 이것을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외교부이지, 응징하고 대응하는 것은 우리 기획재정부 경제 제재하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군사적 응징하면 됩니다.

외교부의 존재가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외교부가 외교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외교부가 잘했다면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이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홍익표 위원** 북한이 미사일 처음 한 것이 언제입니까? 98년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처음 한 것은 98년입니다.

○**홍익표 위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홍익표 위원** 그때 백두1호 쏘았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홍익표 위원** 그것을 왜 쏘았습니까? 94년 제네바 합의 안 되고 남북관계 중단된 상태에서 98년도에 북이 8월에 쏘고 나서 그후에 북미 간에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합의됐지요? 그리고 중단됐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홍익표 위원** 소위 미사일 모라토리엄이 된 것입니다, 북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러다가 북한이……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모라토리엄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런데 북한이 2006년에 다시 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왜 했습니까? 왜 했는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북한……

○**홍익표 위원** 2003년에 제네바 합의가 파기됐고요. 미국 정부가 2002년 10월 달에 짐 켈리 차관보가 가고 나서 제네바 합의 파기하겠다고,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북한도 2003년 이후에는 우리 모라토리엄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길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북한이 UEP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익표 위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홍익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파기를 한 것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홍익표 위원** 자, 보십시오. 그때 UEP는 제네바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홍익표 위원** 자, 중간에 그리고 추가적인 합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후의 사정을

또 설명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 미사일 쏘지요? 북이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중국한테 협조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자신 있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입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왜 분노하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의 입장이 항상 똑같다고만 생각하셔서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왜 분노하나 하면 우리 정부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이번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비회원 참관국 되는 데 어떻게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기권했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것이 됩니까? 장관께서 그다음에 차관도 그렇고, 나와 가지고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11월 17일 트위터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제 한국은 중동 문제를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2009년 10월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책임 묻는 골드스톤 보고서를 채택했을 때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위원** 기권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냥 기권을……

○**홍익표 위원** 이번에도 또 기권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비인도적 행위를 미국이 비호하는 것을 우리가 찬성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잘못된 행위저지에 중국이 동참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 놓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된다 한들 이것이 몇몇한 외교입니까? 중견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은 저하고 홍 위원님하고의 의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권을 한 것도 현재로서는 그것이 중동의 평화

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고……

○**홍익표 위원** 안보리 이사회의 가장 주요 기능 가운데 첫 번째가 국제 분쟁에 대한 조사 및 해결 권고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침략행위나 평화위협에 대해서 강제조치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스라엘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도 중국의 협조 잘 얻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중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이 문제를 중국하고 연결하 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익표 위원** 저는 정말 외교부가 지금까지의 관행, 단순히 한반도 문제를 떠나서,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넘어서, 한반도의 틀을 넘어서 무조건 미국만 추종하는 외교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미국만 무조건 추종하는 외교라는 용어 자체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홍익표 위원** 두 번째, 인권과 이런 것을 무시하는 이러한 외교, 그리고 그러한 무능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외교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런 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제발 말로만 강경하게 하지 말고 행동과 조치로서 실질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홍준**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하 위원** 대체토론을 빨리 끝내고 그냥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 했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논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것이 로켓이나 아니면 미사일이나 할 때 중요한 것은 궤

도 진입을 했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돌아오느냐, 리엔트리(re-entry)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바로 인공위성이냐 아니냐 하는 차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런데 북한이 이제까지 여러 번 실험했는데 하나도 궤도 진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궤도 진입은 인공위성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다 들어갔다가 인공위성은 궤도를 계속 도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사일은 다시 우리 지상으로 돌아오게 해서 궤도권을 다시 해서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탄두가 탑재가 됐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첩보를 알고 그것을 이것은 분명히 인공위성에 관계된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다시 그냥 궤도에만 돌리는 것이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사일인지 또 아니면 인공위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정부고, 또 우리는 이것을 미사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때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하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이 궤도 진입을 시키지 못한 북한의 미사일 여러 차례 실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을 가지고 미리부터 우리가 안일하게 판단을 하고 이것은 인공위성 쏘는 것일 것이다, 북한이 인공위성 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느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탑재되어 있는 것이 뭐가 탑재되어 있는가를 모르는 한에는 그 비행 궤적을 다 살펴서 대륙 간 탄도탄 개발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권에 재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인데 이것을 미리부터 예측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로켓이라고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미사일이나, 이것은 당연히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대체토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 간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결의안을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안의 단어라든지 문장상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이것을 빨리 합의를 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부터 이런 결의안이 나왔고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이것을 발사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힘을 합쳐서 외교가에서도 외교 노력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님은 어떠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여야가 뜻을 같이 모아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하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북한이 쏘기 전부터 우리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지금이라도 늦은 바가 있지만 빨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정부의 힘을 싣고 외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장관한테 여쭙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대선 개입 시도가 17대 대비해 가지고 약 3배로 급증을 했다, 더 급증한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것은 북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나 대선 개입을 집요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리고 보고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김정은이 공안통치를 노골화하고 있고 상당히 긴장 상태가 돌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고,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것을 봐도 장갑차 100여대가 관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의 주요 요소에 배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그 장갑차가 과거 김정일 사망 시에 있었던 장갑차인지, 새로 배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제가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대선 개입에 대해서 오늘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대선 개입을 위한 여러 매체를

동원해서 비난을 하거나 특정한……

○황진하 위원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하는 것은 계속 해 왔고 또 그것을 지금 상당히 수적으로 많이 높이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대선이 자유롭고 공명한 분위기 속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이 그동안의 경험과 민주적 역량의 제고를 해서 이러한 개입에 흔들리지 않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저는 이 중국 특사가,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리젠귀 특사가 다녀갔지요, 외교부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황진하 위원 이 특사가 다녀간 직후에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했던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하루 후에 했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래서 중국이 특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내서 다녀간 직후에 이것 발표한 것도 의미 있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중국 측의 반응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중국의 특사가 다녀간 바로 다음날 나왔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그런 면에서 더 우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위원 아무튼 우리 결의안을 빨리 채택을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외교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데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결론을 건의 드리면서 제 대체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이 결의안이라는 것이 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늦출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도 빨리 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치적인 행위인데 우리가 남북 간에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결의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갈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간사님들보다는 아예 차라리 소위를 해서 거기서 결의안을 조정하셔서 오후에도, 어차피 저는 오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오후까지 현안보고와 질의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안보고 끝날 때까지 그 소위에서 결의안을 합의를 보셔 가지고 오늘 상임위 끝날 때쯤 통과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렇게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홍준 소위를 또 구성을 하려면, 소위 소집을 하려면 오후에 가능할지, 아마 그것도 소위가 의결정족수가 지금 사실은……

○심재권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곤 위원 원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아니요, 그것은 법안심사소위로 넘길 수도 있고 지금 소위를 다시 오후에 소집해서 아마 의결정족수가 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성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두 간사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대체토론 할 중간에라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홍익표 위원 수정 제안 하겠습니다.

일단 간사 협의는 하시고요.

○위원장 안홍준 예, 간사 협의……

○홍익표 위원 간사 협의가 안 되면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안홍준 예, 일단 그렇게 간사 협의해서 하나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어쨌든 대체토론의 형식이든 아니면 현안질의의 형식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꾸 이렇게 현안에 대한 질의가 중단되면서 오히려 올바른 진척이 저해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간사 협의 또는 소위원회 회의로 넘기기로 하되 어쨌든 간에 현안질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우선 홍익표 위원이 절충안 낸 대로 간사……

○위원장 안홍준 그러니까 우선 간사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소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것이 촉구결의안이기에 때문에 발사해 버리면 상당히 이 결의안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아마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는 우리 전체 상임위에서 의결은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간사님께 일단 한번 대안을 만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안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철 위원님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홍익표 위원 이것 7분이지요? 이제부터는 현안 질의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안홍준 예, 현안 질의입니다.

○홍익표 위원 먼저 통일부장관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하고 몇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에 오셔서 국정감사 또는 대정부질문 답변하시기 전에 북측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초안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한 문구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런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 2항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측이 현대와 아태 간에 합의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키로 하였다’라는 2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 정확하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홍익표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장관

께서 몇 번 나오셔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느냐 하면 ‘우리 당국자한테 현정은 회장한테 했던 신변안전 보장해 준다 그 얘기만 하면 관광 재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고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우리의 책임 있는 당국에게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면 실무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익표 위원** 장관님, 장관님 회답 한 번 안 해 보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분명히 당시 정부가 당국 간 실무접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발표를?

○**통일부장관 류우익** 어느 것 말입니까?

○**홍익표 위원** 2010년 2월 8일 접촉을 당국 간 실무접촉이라고 우리 정부 통일부 발표가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것은 분명히 명백히 당국 간 협의이고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합의서는 당국 간 합의서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당국 간 실무협의이니깐 당국 간 합의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음 달……

○**홍익표 위원** 아니, 만약에 이것이 합의가 됐다면 이것은 당국 간 합의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아니, 합의가 안 된 것을 왜 합의되었다고……

○**홍익표 위원** 아니, 합의가 되었다고 했을…… 이 내용이 만약, 제가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합의가 되면 당국 간 합의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당국 간 회의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당국 간 실무회의입니다.

○**홍익표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합의되면 당국 간 합의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거기서 당국 간의 실무 합의가 되는 거지요.

○**홍익표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합의하면 당국 간 합의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당국 간 합의라는 것은 원래 남북 간의 회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다음 스텝으

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이것을 진행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이것이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두 가지입니다. 만약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이 안 하셨다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금강산관광 재개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당시 강경파라고 거론됐던 현인택 당시 통일부장관과 김태효 당시 비서관 사이에서만 논의되고 나머지 분들, 당시 김성환 장관은 외교안보수석이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홍익표 위원** 자칫 정확히 보고되지 않고 했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국기문란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2009년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비밀접촉을 했고요, 김양건 씨랑. 그리고 대통령께서 2010년 1월 달에 BBC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통일부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현인택 장관이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억지로 됐습니다, 북측에 의해서.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서 통일부로 그 아태가 보낸 것을 우리가 통전부로 명의를 해서 다시 보내 가지고 결국은 이루어진 실무회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일부가 했다는 것은 당시 통일부장관과 몇몇 인사들이 애시당초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회담을,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보기에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내지는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그 증언하고요.

저는 류우익 장관의 진심은 믿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류우익 장관께서 이것을 모르셨던 것 같고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국회에 나오셔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면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김형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10년 2월 달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물론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로 확인했느냐, 문서에 의한 선언까지 있느냐에 맞느냐’ 했더니 ‘아, 그것 없습니다’ 이것이 이 브리핑에 있는 내용입니다, 통일부의.

재차 질문합니다. 최소한 당국자한테 신변 보장 얘기한 적 없느냐 분명히 확인해 달라 했더니 ‘없습니다’ 김형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시 보도자료 보시면 그 내용만 짝 빠져 있습니다.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감 표시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북측 대표가. 관광객 사망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이미 다 해결된 상황이니까 마치 전혀 협의를 안 할 것처럼 이 보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상당한 의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장관께서 이 내용의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제가 당시에 이 사실, 아까 외교부장관 얘기하셨듯이 ‘회담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또 이런이런 협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보고를 받는 것인데 이번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도 제가 보고받은 바와 같이 민간 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것은 합의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홍익표 위원 장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말 돌리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당국 간 합의가 되면 당국 간 합의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회담을 외교부 공무원과 통일부 공무원들 잘 하면서 그렇게 이것을 자꾸 부인하세요. 그 기초는 현정은 회장과 아태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당국 간에 보증하는 것입니다. 당국이 보증하고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남북 간 회담이고 일반적인 국가 간의 회담이나 관계 형성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이지요.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은 당국 간에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한 것이니까 우리는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애초부터 이것을 깨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있다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한번 먼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이것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다음 국회가 열리면 당시에 대해서 국정조사 내지는 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알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외교부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실효적 대응이 진짜 가능한지에 대해서 외교부 정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께서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북이 핵폭탄을 한국에 서울에 터뜨리면 1200조라고 그랬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교의 유명한 명언이 뭐니까? 가장 비싼 외교가 가장 싼 전쟁보다 경제적인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 점은 동의합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풀고 외교부의 존재를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만약에 선조치 예방 관리에 대해서 외교부가 손놓고 있으면 모든 대북 문제, 안보 문제, 국방부가 다 하면 되는 거지요. 외교부의 존재 가치, 후배들도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교부의 존재 가치는 이런 것을 예방하고 사전에 국제 협력해서 막아 낼 수 있는 것이 외교부의 존재 가치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후배나 부하를 봐서 외교부장관께서 외교부의 존재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발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모으고 있고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두 장관님, 노고가 많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아주 희망찬 새해를 맞기를 바라구요.

북한이 지금 로켓 발사 준비를 이렇게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국제적인 노력은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효과를 못 거두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오늘 채택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무시할 건가 이것을 아마 두 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 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국회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뜻에서 제가 한두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하는 주된 이유가 과거에는 협상 카드용이었는데 지금은 체제생존용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어제인가 어디 방송에 북한 전문기자가 나와 가지고 그런 과거의 체제생존용이 아니고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우리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체제생존용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북한이 지금 무기를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북한판의 무기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하나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말이지요. 저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나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의화 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번에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해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이 단기적 또 중기적인 대책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한·미·일 간에 그런 대북공조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중국과의 공조란 말이지요. 이 중국이 협조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제가 봐서는 상당히 모두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중국하고 대북 비핵화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지금 연구 중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하고는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단순한 협의 수준보다도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또 무기 수출 같은 이런 것을 통

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외교력을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어쩌면 중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결국 북한의 변화와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오셨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은 동의는 안 하지만 그러한 측면이 조금이라도 없는 안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 우리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명박 정권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차기정권에서 그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 그럴까요, 단초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 부분은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화 위원 제가 지금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나 미사일 쏘는 것도 저쪽에서는 자꾸 거짓말로 다른 소리를 하지만 세상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핵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미사일 쏘려는 것, 탄도미사일,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 비핵화에 대한 처방이나 또 빅딜이나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장하셨던 그랜드바젠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다음 정권에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차기정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냥 격을 갖춘 그런 정상회담보다는 우리 남북 간에는 좀 자주 만나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러한 쪽의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남북이 자주 만나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북측에 대화를 촉구를 했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오히려 우리와의 대화 대신에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치문제가 됐든 군사문제가 됐든 경제문제가 됐든 우리 정부와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자세를 보이면 저는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화 위원 그런데 지금 보기에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체제유지용으로 보는데, 제가 지금 봐서는 북한 동포들에게는 이것이 대미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일부에서는 제 생각에는 북한 동포들에게 ‘거기에 속지 마라’ 지금 이것이 거의 1년 치, 19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1년 치 먹일 수 있는 옥수수 가격과 맞먹는 액수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알리면서 이것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국제적인 제재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여튼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많이 알리는 노력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처음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하고 실제로 한 번 발사하고 또 그 부대경비까지 합하면 북한의 식량부족분 거의 2년 치를 상회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즉 우리가 얘기를 해 왔듯이 먼저 주민을 먹여 살릴 공리를 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설득을 국제사회와 함께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화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심재권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물으셨습시다마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이런 로켓 발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이미 주변 상황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심재권 위원 좀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언제 무렵에, 대략 몇 월 며칠경에 그런 것을 처음 감지하기 시작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날짜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4월에 실패한 이후에 계속 그 지역에서 엔진 실험이 계속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구체적으로 미사일의 동체를 옮긴다든지 이런 정황들을 다 파악을, 그것은 위성으로 잡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재권 위원 아까 우리 정청래 위원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미 CIA 또 NSC 측에서 평양 방문했다,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왜 모르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심재권 위원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된 것은……

○심재권 위원 어쨌든 간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안보무능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또 그야말로 항공 궤적까지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는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왜 그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까?

어쨌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안보무능이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런데 사실상 철회가 가능해 보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심재권 위원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심재권 위원 북한 측에서 저렇게까지 지금 발사 설치를 끝냈는데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다음에 올 결과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심재권 위원 지금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의장 성명에서 소위 말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이 삽입되었고, 이제 자동으로 다시 안보리 논의를 거쳐서 북측에 대한 제재로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무슨 맞춤형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장관, 우리 제재가 이런 상황을 개선시켜 주리라고 봅니까? 우리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어떤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에게 발사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누누이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현재로서 외교적인 목표는 북한의 발사를 중단시키는 것이고, 또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심재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철회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논의한다고 하십시다마는 실제 지금 북측에서도 어떤 제재가 오리라는 것을 그동안의 유엔에서의 결의 등을 놓고 볼 때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제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철회 가능성은 접어두고 그다음에 올 사태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 평화에, 북측과의 관계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긍정적인 효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권 위원 아무 일 없이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제재 국면으로, 철

회가 안 될 때 제재 국면으로 그렇게 북을 응징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오늘도 제재……

○심재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으로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무슨 ‘로켓 발사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 그 뜻이, 로켓 발사를 우리 정부가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요. 문제는 바로 우리 안보무능이 이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씀드리듯이 지금 이 경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재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제재가 가져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이 향후에 북한의 그러한 행동을 다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런 것을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계속 우리 정부의 무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더 잘 하라는 뜻으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정부의 무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100% 동의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제한된 시간에 아까 의논했던 것을 다시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우리 외교부가 뭘 했는지, 우리 정부가 뭘 해 왔기에 또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부가 총체적으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문제는 이렇게 제재가, 제재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재만으로서. 저는 제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5년간의 이 정부의 안보무능이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할 때, 바로 지난 5년간의 이 정부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제재가 따르겠지요. 문제는 이 제재를 넘어서는 그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지요.

지금 장관께서는 아까도 여러 차례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측이 왜 그런 무리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 정부가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는 것을 북측에 제시를 하고, 이미 북측과 그런 면에서 협의를 하자고 우리가 제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재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랜드 바겐이다 뭐다, 누차 드리는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북측에 투항만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북한에 저희가 투항을 요청한 적도 없고요.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심재권 위원 북측의 일방적인 핵개발 철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뭘 하겠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 아닙니다.

○심재권 위원 그렇지요.

자, 지금 그 논의 안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니,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부가……

○심재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핵을 중단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두 개가 병행돼야 된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드렸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권 위원 과연 이것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고, 지난 5년간의 우리 정부의 그런 잘못된 태도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개선도 가져오지 못 했다는 것을 누누이 이미 지적했고 밝혀진 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보충질의할까요? 여기에서 끝내고 다시 보충질의 할까요, 아니면 좀더……

○위원장 안홍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3분만 더 드리세요.

○심재권 위원 문제는 우리가 제재만 가지고서

는, 그야말로 북한이 투항해 들어온다든가 북한이 붕괴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만을 예견하면서 우리가 정책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재와 더불어서 다시 우리가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왜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진단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동안에 일련의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놓고 볼 때 자신들이 보는 판단에 따라서는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선택으로 소위 브링크먼십(brinkmanship)으로 이러한 무모한 짓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그런 더 이상 나아갈 때가 없다, 출구가 없다, 더 이상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북한을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 함께 북한이 문제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이며 사실은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 그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으며, 이런 것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심재권 위원 그래서 바로 이 정부가 지난 5년간 취해 온 그런 대북 대결정책, 대북 대화단절, 아까 금강산 재개 문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 문제가 중요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로켓의 차이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두를 운반하면 그것은 미사일입니다. 로켓은 위성을 실으면 로켓이 되겠지요.

○심재권 위원 탄두를 실어서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그 궤적을 잡아서 발사될 때 그것이 미사일의 한 특징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심재권 위원 또 하나의 특징은 추진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켓이 산화제를 기초로 해서 발사되는 것이라면 미사일은 제트 추진도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 가능한 하지요.

그러나 북한이 동일한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추진체가 미사일은 산화제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마호크미사일 같은 것은 제트 추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탑재하는 것도 폭탄이 아닙니다. 탄두가 아닙니다, 탑재하는 것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성이 탑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마치 그것이 탄두를 싣고 발사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체에 있어서 명백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미사일이 아니라…… 무슨 18대 국회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었기에 로켓이라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니고 로켓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경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경우에 지금 인공위성이라고 자기들이 자칭칭하는 이것의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로 한다는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용어를 그대로 써서 위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프랑스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들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부의 입장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심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혼돈이 돼서 제가 다시 여쭙어 보는 건데요. 일단 지금 로켓과 아까 미사일과……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탄두를 싣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아니냐고, 황진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 재진입하느냐 안하느냐인데, 그 재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탄의 경우는 그 궤도가 50°~60°로 날아가고 인공위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것은 끝까지 80°~90° 사이로 날아가는데 이전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들이 다 50°~60° 궤적으로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사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데 이전에 네 번 이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문헌 위원** 예, 일단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그 측정된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이……

○**정문헌 위원** 그리고 아까 산화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적연질산, 지금 산화제 군사용 북한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이게 뭐 미사일에는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전혀 관계가 없고 미사일에든 사용한다고 알고 있고, 북한에서 지금 UDMH 군용 액체연료 사용하는 부분은 이것은 러시아의 기술을 받았기 때문에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평화적인 이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그 문제는 액체연료를 사용한 것이 평화적이냐 이것은 좀 뭐라고 얘기를……

○**정문헌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피 100kg짜리 위성은 실질적으로 위성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아까 좀 오해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재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명박 정권의 북핵,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 아닙니다.

○**정문헌 위원**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것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병행해서……

○**정문헌 위원** 병행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랜드 바기닝(Grand Bargaining)도 나오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문헌 위원** 그것 분명하지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지금 예방 관리도 안 됐고, 우리 안보 무능이 지금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도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그랬네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2006년 경우도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러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도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한 것은 뭔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니까 이것은……

○정문헌 위원 조의를 표한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기들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자기들 자체……

○정문헌 위원 이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또 프랑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북한이 핵과 연계돼서 지금 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다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문헌 위원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까 금강산…… 2010년 2월 8일 날 실무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각국 정부들이 다른 나라 정부들, 다른 국가나 다름없는 당국 간에 신변안전 보장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문헌 위원 이런 신변안전 협정을 맺는 대표적인 게 영사협정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영사협정 포함해서 이런 협정들을 맺는데 어떤 당국이 아닌 민간 단체끼리 서로 신변 보호하겠다는 것을 인용해서 신변 합의를 한 그러한 경우가 전 세계에 1건이라도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문헌 위원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문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당시 모두발언에서 아태—이것 당국 기관이 아닙니다—아태와 현대아산 사이의 무슨 보도문을 운운하고 인용을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기에 우리 당국자가 아니 이것은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당국자끼리 신변보장을 하는 것을 요구하자 그쪽에서 박차고 나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께서도 당시 수석이니까 잘 알고 계실 테고, 통일부장관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이것은 저희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식으로 이것을 얼버무리고 가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자 박차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양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변보장이라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민간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헌 위원 그래서 하여튼 통일부장관께서도 당국 간에 빨리 우리 국민의 신변이 보장이 돼서 금강산관광 재개가 하루라도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홍준 정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민주당의 김성곤 위원입니다.

사실 용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하고 지금 외교적으로 가장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지금 이것을 위성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 미사일이라고 안 하고 위성이라고 하지요?

장관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이 자기들이 위성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대체로 우리가, 특히 대북 외교에 있어서는 미국과 대체로 입장을 같이하는데 이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용어를 같이 안 쓰는 이유는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용어를 같이 안 쓰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서 쓰는 것인데 미국은 위성이라는 말에 양쪽에 따옴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한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인공위성이라 칭하는 미사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나 캐나다는 그냥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나라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중국의 입장이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요. 한편으로 북쪽에 줌 워닝(warning)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어느 나라나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표현을 보시면 앞부분에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해당은 되지만,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부당한 의무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을 뒤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보시면 중국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성곤 위원** 저는 개인이나 집단 간이나 충돌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어느 한쪽에만 원인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체로 양쪽이 원인을 갖고 충돌까지 이어지는데…… ‘손바닥도 마주 쳐야지 소리가 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한쪽이 싸움을 걸 때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쪽이 싸움에 응하지 않으면 싸움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다고 싸움을 걸 때 우리가 그냥 당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저쪽이 싸움을 걸려고 할 때도, 저는 우리 쪽이 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강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싸움으로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관

리를 잘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싸움을 안 할 수 있으면 저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글썽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가 무능해서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섬섬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명박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라는 분들의 대북 인식이 ‘북한 너희들은 나쁜 놈이다’ 하는 이런 소위 대북 인식 이것이 남북관계를 지금 계속 꼬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민족통일의 파트너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도 언젠가는 또 평화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저쪽도 자꾸 도발을 하고 대화에 응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북한보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또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 도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나 무력조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힘이 없고 약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아까운 젊은이 46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북한이 나쁘니까 더 이상 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과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라는 점을 좀……

○**김성곤 위원** 그때 하여튼 추가 공격 안 하신 것은 잘했는데요.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북한의, 우리는 로켓이라고 하고 또 장관께서는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인공위성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어느 나라나 물

론 인공위성을 다 발사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그것은 평화적 이용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그만큼 능력을 갖춘 나라들인 경우에만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경제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북한이 주민들을 잘 먹여 살리고 잘살면서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식량이라든가 이런 원조 지원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판단이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만의 하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그것이 목표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글썄, 그게 북한을 보는 시각의 입장인데요. 만의 하나 그 로켓에 위성이 실려 갖고 궤도에 진입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궤도에 성공을 했다…… 이것은 지금 안보리에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은 북한의 발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안보리로 가도록 그렇게 안보리가 한 것이고요. 전 세계의 국가들이 안보리에서 이렇게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과 제일 가깝다고 지금 평가되는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참을 했던 이유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어쨌든 이 로켓에 실리는 것은 무기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간주하시는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번에 인공위성을 쏘면서, 자기들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탄두를 탑재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위장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미사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까 심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북쪽에서 미사일 아니면 로켓을 쏘을 경우에 그 뒤에 아무래도 제재가 뒤따를 텐데 그동안에도 여러 번 북한은 이런 시도를 했고요, 그때마다 또 이런저런 제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이 그 제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김성곤 위원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개선이 목표라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개선이 목표입니다.

○김성곤 위원 개선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 좀 다른 방법의 선택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을 안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래서 강경, 소위 체찍과 당근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가능하면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가능하면 좀 강경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대북 강경 대응 내지는 제재 이런 것의 연속으로 해 갖고는 개선의 여지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외교력을 모으는 것은 제재를 위해서 외교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발사를 하지 않도록 끝까지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설득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홍준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위원 많이 시장하시겠습니다. 저도 배고픕니다. 하여튼 눈총 받는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심윤조 위원님 질의에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예를 들어 2006년 때는 북한만 문제 삼았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퍼 줘 가지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했다고 얼마나 당시 야당에서 정부를 공격했는데 무슨 북쪽만 공격을 했다고 하는 건지 전혀……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도 어쨌든 이 정부가 무능해서 자꾸 이렇게 대북관계가 악화되고, 더군다나 세 번씩 했다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2006년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퍼 줘서 그래서……

통일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진짜 로켓 발사 이것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퍼 줘서 그 돈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그것을 판단하고 이러는 게 적절치……

○유인태 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유럽에 가서 유로뉴스(Euronews)인가하고 회견하면서 그 비슷한 말씀을, 지난번 정권에서……

○통일부장관 류우익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한이 일관되게 핵을 개발하고 또 핵탄두를 운반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뭐 주거나 말거나 꾸준히 해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인태 위원 아니, 어제 토론 보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조차도 ‘퍼 주기로 이룩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하면서…… 지금 그 소리 들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시다, 맨날 퍼 줘 가지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안 퍼 줬잖아요? 안 퍼 주셨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 지원 끊었잖아요, 개성공단만 유지하고? 그런데 어떻게 안 퍼 줬는데 미사일 발사를 두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퍼 줘서 했다 그러는데 안 퍼 준 정부에서 어떻게, 북쪽이 뭘 돈이 있어서 안 퍼 줬는데 또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퍼 주기와 관계없이 지금도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는 일관되게 도발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강조한 점은 주

민이 지금 굶고 또 생활로 상당히 고통을 받는 데 많은 돈을 이렇게 쓰는 것 온당치 않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태 위원 그 대목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특별히 뭐 제가 생각이 달라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실 일은 아닐 것 같고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인태 위원 그러니까 결국 퍼 줘서 꼭 했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일부장관 류우익 동의하고 안 하고 간에 그 돈이 도움이 됐다면 됐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유인태 위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했던 정세현 지금 원광대 총장이 10년간 북으로 간 현금은 탈탈 털어 1조 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들으신 일이 있으세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제가 그것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나 우리가 지금 북에 식량차관으로 준 돈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것 지금 몇 달째 독촉을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서 일체 대답이 없이 갚는다 안 갚는다 소리도 없고 일체 반응이 없습니다.

이 말은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차관으로 갚음에도 그것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갚는다 안 갚는다 말도 안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이런 얘기입니다.

○유인태 위원 장관님, 자꾸 제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다 아는 얘기, 자꾸 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통일부장관 류우익 1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태 위원 아니 글썄, 1조다 그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만 미사일이 되었던 로켓 발사하는 데 쓴 돈이 한 1조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게 하도 퍼주었다고, 그 얘기가 과거에 그친 게 아니라 어제 토론회에서조차도 퍼줘 가지고 그것은 가짜 평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한번 장관의 견해를 여쭙어 본 것이고요.

우리 대체토론 때 얘기하려다가 안 한 것이지만 ‘촉구 결의안’ 이것 시기를 놓치면 없는 것이

고 새누리당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만날 그런 생각, 똑같은 얘기하던 데니까 이쪽이 꺾야 그 결의안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새누리당에서 대폭 양보해서, 그리고 로켓이 아까 미국도 그렇지만 유엔, EU도 다 로켓이니 위성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대폭 양보해 가지고 빨리빨리 되는 것이 의미가 있지, 틀어져서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북쪽하고 대결주의로 가듯이 야당하고도 대결주의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잘 해보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홍준 유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도 배고프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1945년 8월 해방정국 때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공군기 타고 왔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그러면 공군기예요, 전투비행기.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투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객기라고 할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정청래 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급거 귀국을 해야 되는데 여객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공군기, 전투기 타고 이승만 박사가 귀국했습니다. 그러면 전투기는 전투기예요. 그런데 전투하러 온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타고 있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자,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지금 북한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확인하고 있듯이 지금 발사하려고 하는 것에 무기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북한은 위성을 탑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지요, 위성이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그러면 그냥 로켓이에요, 용어

규정상.

저는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미사일이다 하는 것은 이해해요. 왜? 그래야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자신들에게 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뭐 그냥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용어를 가급적이면 순화해서 써야 됩니다.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그것 미사일이다 하는 것도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해요. 그러나 국방부하고 외교부의 입장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 그러니까 의도가 그렇게 있는데, 외교부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부처이고, 국방부는 단호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그렇다면 외교부에서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외교적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통일부는 왜 존재합니까? 남북 평화 통일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좀 더 민족애적·동포애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전투 용어를 외교부에서 통일부에서 사용한다고 그 부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실무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용어 사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요, 흔히 얘기하는 보수정권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7·7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연평해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핵실험이 있었어요, 북한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평

도 포격사태가 있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위원 저는 북한의 이러저러한 정치·군사적 행위들이 남쪽 정부의 무능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남쪽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도 않아요.

문제는,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따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 정부, 북한 당국의 책임은 분명한데 그것을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 정부와 그 부처가 유능하냐 무능하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국회의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왜 그것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깁니까, 북한 책임이지?’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로켓 발사하고 하는 것이 북한 책임이 아니더라도 주장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대중 정부 때는 연평해전이라는 긴박한 군사적 긴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금강산을 안 단았어요. 자, 노무현 정부에서요 핵실험을 했지만 10·4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옳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연평도 포격이 있었어요. 천안함 폭침이 있었어요. 5·24 조치를 했어요, 금강산을 단았어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냐는 것이지요.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더 실익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노태우 정부든 북한하고 할 일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기본합의서도 채택하고, 7·7 선언하고, 정치적 합의가 유일하게 없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에요. 북한하고 연락도 못 하고 전화 통화도 못 하고 만나지도 못 하고, 의미 있는 정치적 합의를 한 건도 못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태우·전두환 정권보다 훨씬 더 못한 남북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로켓 발사, 북한의 이 소동, 이 사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년 핵실험보다 그렇게 더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면 연평해전·핵실험 이것이 훨씬 더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상황

이지요, 지금 상황보다.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라인이 있었어요, 북한하고. 자, 국방부에서는 강력한 조치, 응징·보복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는 사람은 싸우더라도 말리는 사람은 말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통일부하고 외교통상부가 국방부장관처럼 행세를 해요? 그것은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썽요, 저는 국방부장관처럼 행동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위원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지요, 우리 통일부장관님이나 외교부장관님이나.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시는 국방부장관 못지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외교부는 외교부답게 외교적 수사를 해 가면서, 국방부가 직선이라면 외교부는 좀 곡선으로 이렇게 좀 달래 가면서, 어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통일부에서는 외교부보다는 더 동포애적 관점으로 좀 더 전진된 입장에서, 때로는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못 할 것을 통일부에서는 필요하다면 좀 더 굽히고, 사과라도 할 것 있으면 외교부에서 못 할 것이면 통일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좀 반대하더라도 통일부는 북한 사람들 그래도 좀 도와주자, 좀 마음을 달래 주자…… 그러려고 있는 게 통일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님,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트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 영유아 지원법……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안홍준 예.

○정청래 위원 북한 영유아 지원법하고 그다음에 경험 피해자 긴급지원법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아마 이 정부 끝나고 내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이것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통일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2011년 상황, 2012년 유니세프 보

고서에 보니까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조사했더니 0세부터 6세까지 87%가 영양실조라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5%,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되는데 지금 북한 영유아들이 커도 성인 구실을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것 모든 것을 떠나서, 정치·경제 모든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통일부에서는 이 정부 끝나기 전에 국회하고 합심해서 뭔가 성과는 하나 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정청래 위원님, 그 영유아 지원, 북한의 영유아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은 같이하고요. 정부에서도 영유아와 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남북관계의 경색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법으로 정하는 데 따른 문제들은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긴급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정의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 속에 있는 한반도 정세이지만 최근에는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의 증가로 긴장감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로부터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외교적·정책적 조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염려와 정책적 제언들을 남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심재권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유인태 위

원님, 정청래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정문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당 좌석에 두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류우익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하지 못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는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 성 곤	김 영 우	길 정 우	박 병 석
심 윤 조	심 재 권	안 홍 준	유 인 태
원 유 철	원 혜 영	이자스민	인 재 근
조 명 철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의 화
정 청 래	홍 익 표	황 진 하	

○청가 위원(2인)

박 주 선 이 병 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성 석 호
전 문 위 원	배 용 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 관	김 성 환
기 획 조 정 실 장	조 대 식
다 자 외 교 조 정 관	김 봉 현
국 제 기 구 국 장	김 문 환
북핵외교기획단장	이 도 훈
평화외교기획단장	김 수 권

통일부

장 관	류 우 익
기 획 조 정 실 장	김 남 식
통 일 정 책 실 장	천 해 성
정 세 분 석 국 장	김 기 웅
교 류 협 력 국 장	황 부 기
남 북 회 담 본 부 장	양 창 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조명철·이자스민·한기호·하태경·
황진하·김태원·이종훈·김상민·송영근·
유정복 의원 발의)

11월 23일 회부됨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2012. 11. 23 원유철·여상규·이강후·이완영·
주호영·윤상현·함진규·권은희·손인춘·
윤명희·김영우·황진하·이만우·심윤조·
조현룡·김정훈·김재경 의원 발의)

11월 26일 회부됨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6 정청래·김우남·배기운·홍종학·
유성엽·조정태·김관영·최민희·인재근·
우윤근 의원 발의)

11월 27일 회부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8 김기준·이상직·이인영·윤호중·
배기운·노회찬·이종걸·전순옥·한정애·
민병두 의원 발의)

11월 29일 회부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9 심재권·한정애·김성곤·유은혜·
이인영·우윤근·정청래·김윤덕·진성준·
이종걸·전정희·강창일 의원 발의)

11월 30일 회부됨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2012. 12. 5 정문헌·길정우·김기선·김도읍·
김명연·김영우·김을동·박대출·서용교·
손인춘·신의진·심윤조·안홍준·원유철·
윤상현·이병석·이자스민·이장우·이철우·
이현재·정병국·정의화·조명철·홍지만 의원
발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2012. 12. 5 심재권 의원 외 10인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회부됨